광남일보

조간 제 8025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음력 12월 24일)

광주·전남 '1시간 생활권'…광역 교통망이 관건

행정통합 '전남광주특별시' 발전방안 및 제언

〈1〉프롤로그
〈2〉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확충
〈3〉군 공항 이전·무안국제공항 활성화
〈4〉AI·에너지·모빌리티 클러스터
〈5〉글로벌관광벨트 구축
〈6〉광역교통망 재정비

공항·철도·항만 잇는 트라이포트…'글로벌 관문' 역할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무안공항 활성화 절실
광주·동서부권 인프라 확충…"통합 생활권 안착 기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권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와 서남권의 공항, 동부권의 항만 등 내륙과 바다, 하늘길을 잇는 광역 교통망 재편의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광주·전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는 공항·도로·철도·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다. 통합 시·도민이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생활권 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 교통망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물류 비용 절감과 정주 여건 개선, 인접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메가시티 도약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광주송정역을 거점 복합환승센터로 육성하고,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키운 뒤 이를 목포신항과 광양항으로 철도로 촘촘히 연결할 경우, 경제·문화·생활권 통합을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주·전남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시·도민 이동 편의와 생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통합 도시는 무안공항, 광양·목포항, KTX를 축으로 한 '트라이포트(Tri-port)' 체계를 완성해 글로벌 관문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담고 있다. 특히 광역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특례를 통해 광주·전남 전역을 60분 단일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교통 체계가 구축되면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산업단지·항만·공항·에너지 인프라 간 연계가 강화돼 기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처럼 광주시와 전남도로 행정 체계가 분리돼 있을 경우, 도로·철도 건설을 둘러싼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예산 분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합이 이뤄지면 단일 행정 주체로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크게 높아진다.

관건은 시·도간 연결 구조의 대대적 개편이다. 광주권과 전남 동부권·서부권을 잇는 촘촘한 도로·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 광주 상무역에서 나주 혁신도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대중교통망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광주와 전남 서남권을 하나의 경제·문화 공동체로 묶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동부권 역시 순천·여수·광양을 잇는 전철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광주권과의 심리적·물리적 거리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교통망의 확장은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용객이 늘고 있는 광주송정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고,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해 이를 목포신항과 광양항으로 철도로 연결하는 물류 체계가 완성되면, 전남의 농수산물과 광주의 첨단 AI 제품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 구축도 가능해진다.

길이 44.7㎞의 광주 신산업선은 광주 서북·서광산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광주 지역 산업단지의 약 90%가 밀집된 권역을 아우른다.

여기에 전남·전북이 건의한 서해안선(새만금~영광~목포)이 지나는 영광까지 연결될 경우, 국토 서남권 산업·물류·교통을 통합하는 호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광주에서 영암 대불산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확충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침체된 서부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서남권 철도망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려면 광주 신산업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법 45개 특례 재검토·지방이양 TF 발족"

김민석 총리-시도지사·국회의원 회동서 합의
'불수용 특례' 특별법 통과 이전 해법 찾기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광주전남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특례 조항을 재검토하는 한편 보다 과감하는 재정 및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 논의할 TF(테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11면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 총리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은 전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관련해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회동에서 김 총리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꼭 반영돼야 할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다 과감한 중앙정부의 재정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374개 가운데 119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무안군 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한 다섯번째 간담회를 갖고, 중앙 부처가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꼭 반영돼야 할 45개 특례를 추려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재정 및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고, 일부 특례에 대해 불수용을 밝힌 정부 부처 의견을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재정 및 권한의 지방 이양을 본격 논의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를 열어 전남광주를 비롯해 충남대전,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의 심사에 착수했다.

이 중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등 모두 5건이다.

행안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소위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병합 심사를 벌인 뒤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개호·정준호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선언

이, "남부권 시대 개막"…에너지·산업발전 구상
정, 퓨처밸리 등 AI 대전환 이끌 '3+1 전략' 제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정치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전남도의회에 이어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호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남부권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호흡을 맞추며 일해온 경험이 있다"며 "전남광주를 속속들이 꿰뚫는 현장 이해와 국정을 이끌어온 정책 역량이 결합된 준비된 후보"라고 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3대 중점과제와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개호

정준호

3대 중점과제는 △에너지 자주권 실현을 위한 지산지소 원칙 정착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국가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20% 유치 등이다.

에너지 생산지인 전남의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를 지역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